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6차 회의 회의록

1. 일 시: 2024. 11. 13.(수) 14:00~17:45
2. 장 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3. 출석인원: 별지 기재와 같음
4. 내 용: 별지 기재와 같음

등록번호	173
등록일자	2025. 1. 13.
처 리 과	기획운영담당관실

위 원 장



간 사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6차 회의 회의록

2024. 11. 13.

사법정책자문위원회

## I. 개요

- 일시: 2024. 11. 13.(수) 14:00~17:45
- 장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 참석자
  - 권오곤(위원장)
  - 김영훈, 이경춘, 전원열, 조현욱, 차병직(이상 위원, 가나다 순)
  - 윤성식(간사), 이문렬(서기)
- 배석자
  - 이창경, 이지영, 장정환(이상 주무위원), 김용현(민사지원제1심의관)
  - 황인성(실무지원단장), 고병석, 고원혁(이상 실무지원단원)

## II. 의사개요

### 1. 제5차 회의 회의록 확정

-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5차 회의 회의록을 확정하였음

### 2. 대법원장 2차 부의 안건 상정 및 기상정 안건 철회

#### 가. 안건 상정

- 위원회는 대법원장이 2차로 부의한 안건을 사법정책자문위원회 논의주제로 상정하였음(구체적인 안건은 아래와 같음)
  - ① 재판절차
    -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 제고 방안



- 법원에 대한 대외적 부담 요인 분석과 법원의 보호 방안

○ ② 법관인사제도

- 시니어판사 제도

**나. 기상정 안건 철회**

- 위원회는 ‘판결서 적정화’에 대한 안건 상정을 철회함

**3. 대법원장 2차 부의 안건 설명**

**가.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 제고 방안**

- 이지영 주무위원, 논의의 필요성, 주요 쟁점, 위원회 논의 필요 사항 등을 보고함

- 다음과 같은 위원장의 질의 및 이에 대한 이지영 주무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위원장

- 현재 운영 중인 증인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지영 주무위원

- 증인지원제도는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할 때 겪는 심리적 고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임
- 각급 법원에 증인지원실이 설치되어 있고, 법원 직원 중 행정관이나 사무관이 증인지원관으로 보임되어 있음. 심리적으로 취약한证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고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센터에 연계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위원장

- 재판부에서 특별히 요청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형사사건의 증인들은 자동으로 증인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 이지영 주무위원

- 재판부에서 증인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이는 증인에게는 연락을 취하여 증인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증인소환장 송달 시 증인지원제도를 안내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 위원장

-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증인의 역할이 지대함을 잊지 말아야 하며, 해외 제도 등을 참고해서 증인지원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김영훈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이지영 주무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김영훈 위원

- 장애인 피고인을 변호하거나 장애인 피해자를 대리할 때 변호사들이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이지영 주무위원

- 법원에서 관리하는 국선전담변호사를 대상으로 자체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검찰 측에서 관리하는 피해자 국선대리인에 대해서도 검찰 측과 공유하여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나. 법관에 대한 대외적 부담 요인 분석과 법관의 보호 방안**

■ 이지영 주무위원, 논의의 필요성, 주요 쟁점, 위원회 논의 필요 사항 등을 보고함

**다. 시니어판사 제도**

■ 이창경 주무위원, 논의의 필요성, 주요 쟁점 등을 보고함

**4. 민사항소심 심리모델 개선**

**가. 기초발제**

■ 이지영 주무위원, 민사항소심의 현황·문제점 및 심리방식 개선의 필요성, 심리방식 개선을 위한 기존의 노력과 현재의 문제점, 심리방식의 개선 방향, 항소기록 접수 통지·항소이유서와 답변서의 제출, 사건의 분류와 신건합의 및 증거채부, 변론준비 절차, 변론기일, 판결서 작성, 전문위원 제2연구반 논의경과 등을 보고함

**나. 토론**

■ 다음과 같은 위원장의 질의 및 이지영 주무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위원장

- 영미 재판에서는 변론준비단계에서 주장 및 증거에 관한 쟁점 정리가 이루어진 후 집중적으로 변론이 진행되는데, 이런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한 적이 있는지?

○ 이지영 주무위원

- 영미에서는 당사자가 소 제기 후 증거를 우선 수집한 다음 변론이 진행되기 때문에 심리절차가 집중적으로 진행됨. 반면 우리나라는 2010년경에 이르러 비로소 절차협의를 통한 집중심리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음
-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이미 증거조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집중심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당사자가 특정 결론을 고집한다든가, 대리인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적인 증거신청을 인용하는 관행이 반복되다보니 집중심리가 잘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위원장

- 실무상 변론준비 과정에서 항소인과 피항소인이 신청할 증거가 다 접수되는지?

○ 이지영 주무위원

-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설정하면 우선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서 주장 및 불복 범위를 밝히고 이후 피항소인이 주장을 밝힘. 1회 기일 전에 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고 1회 기일에서 증인신청, 감정, 사실조회 등에 대한 증거채부 결정을 하는데, 기일이 속행될 때마다 신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심리가 집중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위원장

- 항소인이 증거신청을 하더라도 피항소인은 증인들이 어떤 증언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 이지영 주무위원

- 항소인이 증거신청을 하여 그 입증취지를 밝히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채부결정 과정에서 대체로 상대방은 증인이 증언할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음. 만약 예측하지 못한 증인이 나와서 새로운 증언을 한 경우에는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기일에 탄핵할 증인을 신청하면 채택결정을 하기도 함

○ 위원장



- 1회 기일에 변론을 마치는 것이 가능한지?

○ 이지영 주무위원

- 1심에서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항소심에서는 경험적으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음.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형사재판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다음과 같은 전원열 위원, 위원장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이지영 주무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전원열 위원

- 미국 법률가들은 동아시아를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들의 소송절차를 규문주의로 보고 있음. 또한 영미에서는 재판을 양 당사자의 치열한 변론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으로 생각하지만, 대륙법계에서는 법관이 사안을 인식해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이런 인식 하에서는 영미식의 세부적인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재판 방식이 근본적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위원장

- 전원열 위원께서는 어떤 재판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전원열 위원

- 작은 사건에서는 규문주의 방식이 효율적이지만, 쟁점이 많은 큰 사건에서는 영미식의 재판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이지영 주무위원

- 우리나라 재판제도가 과거에는 규문주의 방식이었으나, 근대화된 이후에는 영미식 제도가 많이 도입되어 지금은 혼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각 제도의 장점을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전원열 위원

- 미국에서는 민사·형사의 재판절차가 유사하고, 변론 이전 단계에서 대부분 합의로 종결됨. 뿐만 아니라 증거법도 민사·형사가 거의 같음
- 반면, 우리나라는 전문법칙에 대해서도 민사·형사가 다르게 적용되고, 서증과 증언의 증거가치 또한 민사·형사 재판에서 다르게 취급되는 면이 있음
- 사법부 차원에서 사실심리과정이나 재판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필요



요가 있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조현욱 위원 의견, 위원장의 질의 및 이에 대한 이지영 주무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조현욱 위원

- 민사재판에서도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설정하여 제출기한이 지나면 실권효를 부여하고, 공격·방어방법이나 주장에 대해서 결정으로 각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데 찬성함. 실제 운영 과정에서 엄격하게 적용할지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속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위원장

- 오늘 일정이 있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김영화 위원께서 의견을 주셔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음. 김영화 위원께서는 「‘민사항소심 심리모델과 관련해서 달라진 사법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변화를 시도할 때’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항소심을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크게 덧붙일 의견이 없음」이라는 의견을 주셨음
- 만약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에 대하여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습니다.’라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석명을 하는지, 아니면 각하결정을 하는지?

○ 이지영 주무위원

- 어떤 부분이 사실오인이고 어떤 부분이 법리오해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항소이유서의 적법한 제출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지만, 결국 재판사항이기 때문에 개별 사례를 통하여 판례가 축적되어야 할 것임

■ 다음과 같은 차병직 위원, 이경춘 위원, 전원열 위원, 위원장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이지영 주무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차병직 위원

- 재판의 본질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게임’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게임’이라는 비유가 생소하지만, 엄격한 규칙에 따라서 진행되며 그 결론은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것이므로 거부감을 가질 필요



는 없음

- 전형적인 당사자주의는 ‘게임’ 쪽에 가깝고, 전형적인 직권주의는 실체적 진실을 중시하는 입장에 가까움
- 항소이유서 제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결국 절차적인 문제인데 절차적인 문제를 엄격하게 시행하면 실체 진실을 외면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한 번쯤 시도해볼 만한 제도라고 생각함

○ 이경춘 위원

- 배심제도의 민사재판 도입 논의가 유아무야된 상황에서, 결국 법관이 실체를 잘 인식해야만 좋은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함
- 건의문(안)에서 제시한 방향으로 실무를 진행해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며, 시기적으로도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발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전원열 위원

- 심급의 기회가 많이 부여될수록 실체 진실이 밝혀진다는 명제는 오해라고 생각하며, 2심에서 새로운 주장과 증거가 제출되는 행태는 개선될 필요가 있음. 법조인들이 1심이 사실심리 기회의 전부라고 인식한다면 1심이 지금보다 충실하게 진행될 것임
-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규정을 바꾸는 것 못지않게 전체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 정도의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서도 같은 논의를 반복하게 될 것임

○ 위원장

-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일종의 ‘게임’으로 인식해서 진행해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열등하지 않다고 생각함. 회의자료 69면과 같이 변론준비기일 진행이 실무에서 감소 추세에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 이지영 주무위원

- 현실적으로 기록 검토 및 판결서 작성 시간이 부족한 면이 있고, 준비절차종결 후 실권효 등을 실무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한 실익이 없기 때문





에 변론준비기일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추측함

○ 위원장

-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도입 당시 실권효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 이지영 주무위원

-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도입의 취지, 개정 민사소송법 내용과의 논리적 일관성, 명확한 기준 설정의 필요성, 성실하게 소송에 임하는 당사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임
- 민사소송법상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각하 규정이 항소심에 당연히 적용되지만 실무상 법관의 재량으로 활용되지 않았던 것임. 1심 충실화를 위하여 각 재판부에 맡겨두는 것보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위원장

- 건의문(안)의 개선방안 첫 번째 문단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심리 집종의 토대로 삼으면서도 사안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안’ 중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 이지영 주무위원

- 1심에서 쟁점이나 사실관계가 충분히 현출되지 않았거나 간이한 특례를 거쳐서 처리된 소액 사건, 공시송달로 진행되다가 항소심에서 송달이 이루어진 사건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그 외에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사실상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체적이고 종국적인 해결을 위해 실권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의미임. 향후 심리모델을 권유할 때에도 이와 같은 부분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과도기 단계에서는 좀 더 유연한 적용을 통해서 일단 실무에 안착시키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위원장

- 민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는 실권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규칙으로 실권효를 두는 것이 타당한지 고민이 있었음. 그러나 현재 민사소송법



에서 규정하는 실권효가 항소심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의 개정이라면 시도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김영훈 위원의 의견, 위원장의 질의 및 이에 대한 이지영 주무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김영훈 위원

- 사후심적 요소를 가미한 운용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기판력의 기준 시점이 사실심 변론종결시인 점, 1심 각 재판부에 편차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완전한 사후심으로 가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음
-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대상을 ‘주장’으로 한정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공격·방어방법’까지 모두 포함하는 데에는 반대함. 민사소송규칙은 민사소송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므로 ‘공격·방어방법’까지 포함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 대한변협 차원에서도 변호사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신속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함

○ 위원장

- 주장이 아닌 공격·방어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 김영훈 위원

- 증거신청이 대표적인 예임

○ 위원장

- 주장 없이 증인신청이 가능한지? 항소이유서 제출 시 증인신청도 하는지?

○ 이지영 주무위원

- 형사항소심의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주장을 다투는 사유를 적시하도록 하고 있음. 증거신청의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시에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고 1회 기일에 구체적인 입증취지를 밝히면서 증인신청을 하더라도 채택하고 있음
- 김영훈 위원님 의견에 대해 추가 설명을 드리겠음. 회의자료 41면에 제시된 법률안 및 규칙안은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회 단계에서 논의되었지만 사법행



정자문회의에 건의되지 않은 법률안 및 규칙안임. 여기에서는 항소이유에 적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원칙적으로 변론에서 제출할 수 없도록 하여 실권효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반면 회의자료 47면 중 이번 전문위원 연구반에서 제안하는 규칙개정안 중 2안(‘주장’으로 한정)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겨서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주장을 제출할 때 각하 여부를 재량 형식으로 규정하여 기존 의무적인 실권효 규정과는 다른 면이 있음.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였음
- 1심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있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이 차단되지 않으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도 기본 40일에 30일 연장이 가능하여 상당히 여유 있게 설정해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림

○ 위원장

- 전문위원 연구반에서는 1안(공격·방어방법 모두 제한)과 2안(‘주장’으로 한정하여 제한)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지?

○ 이지영 주무위원

- 회의자료 100면에 기술되어 있음. ‘주장’으로 한정하여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7명, 공격·방어방법까지 포함하여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1명으로, 2안(‘주장’으로 한정하여 제한)이 다수 의견이었음

▣ 다음과 같은 전원열 위원의 질의 및 이에 대한 이지영 주무위원의 답변, 이경춘 위원, 위원장의 의견이 있었음

○ 전원열 위원

- 민사소송규칙 개정안 2안(‘주장’으로 한정하여 제한)에 따를 때,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준비서면으로 주장이 제출될 경우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 이지영 주무위원

- 변론기일에서 바로 각하 결정을 하면서 조서에 기재하는 방식과 판결문에서 주장을 각하하는 방식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전원열 위원

- 판결 선고 전 변론조서에 기재하거나 결정문으로 고지할 경우 당사자들의 반발



이 염려되어 질문드렸음. 실무가 바뀌기 위해서는 규칙 개정뿐만 아니라 법조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초기 시행 과정에서  
각하 결정의 사례가 누적되어야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이지영 주무위원

- 전원열 위원님 말씀대로 선도적으로 실무를 이끄는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 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를 TF 구성원으로 모집하여 연구하였음

○ 이경춘 위원

-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 시도를 해볼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함

○ 위원장

- 항소심은 집중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제도가 도  
입되었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각하되는 사례가 생기  
게 되면 당사자 측에서 항소이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것이고, 이는  
결국 신속·적정한 재판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과 합치된다고 생각함

## 다. 건의문 의결

■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의결하였음

○ ① 지향점

- 항소심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당사자의 고충과 사법신뢰도 저하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심 심리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항소이유서 제출제도의 도입, 경륜 있는 제1심 재  
판장의 증가에 따른 제1심 충실화 여건 마련, 변호사 수 증가에 따른 소송대리  
사건의 증대 등 변화된 사법환경을 고려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하는 집중된 심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② 개선방안



- 항소인이 항소심에서 판단받기 원하는 주장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을 지나 제출하는 것을 제한하여, 심리 집중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안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항소심의 역할에 맞는 증거채무 기준을 마련하여 당사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항소이유에 기반한 쟁점과 심리대상에 초점을 맞춘 증거의 일괄적인 신청 및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증거조사 지연으로 인한 심리 장기화를 방지할 필요 있음
- 항소이유에 집중한 심리방식에 상응하여,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기능을 강화한 항소심 판결서 작성을 통해 국민이 판결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15:55경 정회

※ 16:15경 속회

## 5. 공판중심주의의 적절한 운영

### 가. 기초발제

- ▣ 이지영 주무위원, 공판중심주의의 적절한 운영방안, 공판중심주의 실질화를 위한 간이공판절차 요건 재설계 방안, 피고인 불출석 재판 제도 개선방안, 전문위원 제2 연구반 논의경과 등을 보고함

### 나. 토론

- ▣ 다음과 같은 위원장, 이경춘 위원의 질의 및 이에 대한 이지영 주무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 위원장

-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김영화 위원께서 주신 의견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음. 김영화 위원께서는 「공판중심주의의 적절한 운영과 민사항소심 심리모델 개선은 재판지연과 장기화로 인한 문제점이 명확하여 지향점 부분은 매우 공감하고 있음. 먼저 공판중심주의와 관련해서 관련성과 필요성에 근거한 선별적인 증거



신청 및 채부, 쟁점에 집중된 증인신문과 합리적 방식의 서증조사, 녹음·녹화물에 관한 증거조사 방법 및 공판정신절차 개선 등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도 동의가 되는 해법이라고 판단됨. 검사 보관 증거서류의 열람·복사 문제는 예산과 인력을 늘려서라도 서둘러 해소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여기며 검찰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문제해결에 협조할 대목이라고 여겨짐. 다만, 간이공판절차 회부나 불출석재판의 요건 부분은 전문가적인 견해가 중요할 것 같아 나머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으로 같음하고자 함」이라는 의견을 주셨음

○ 이경춘 위원

- 간이공판절차 부분이 개선안대로 변경될 경우 기대효과와, 검사에게도 간이공판절차 개시 신청권을 부여한 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청드립니다

○ 이지영 주무위원

- 회의자료 60면에 서술되어 있듯이, 특히 형사단독 사건의 경우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관계로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 증거조사를 간이하게 진행하는 사례가 존재하는데, 간소화 진행은 향후 위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간이한 사건은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경춘 위원

- 두 번째 주제와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반에서 검토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함.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검찰 측과도 논의가 되었는지?

○ 이지영 주무위원

-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선별적인 증거신청 의무를 위반했을 때 기각할 수 있다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 측에서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증거채부는 기본적으로 재판부의 권한이기는 하나, 대검 공판송무부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라는 정도로 전달해 두었음

○ 이경춘 위원

- 개선안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도 증거능력이나 신빙성 측면에서 가치가 없는 증거는 과감하게 제외하고 중요한 증거를 선별하여 신청하려



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드렸음

- 개선안에서 의도한 대로 중요한 증거를 선별·제출하여 재판절차가 진행된다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형사절차의 심리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위원장

- 선별적 증거신청을 조문화한 내용이 있는지?

○ 이지영 주무위원

- 회의자료 요약본 18면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제132조 이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음

■ 다음과 같은 전원열 위원, 위원장, 김영훈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이지영 주무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전원열 위원

-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용을 위한 세 가지 주제 방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함. 한편 미국 증거법에서 원·피고가 제출할 수 있는 것은 ‘material’하고 ‘relavant’한 증거임에 반하여, 회의자료 18면 규칙 개정안 제132조 제2항에서는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 관련되고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material’은 매우 핵심적으로 필요하다는 어감이 강하고, ‘relavant’는 단순한 관련성 이상의 중요한 관련성을 의미하는데 반하여, 개정안의 ‘관련성’은 어감이 약한 느낌이 있음. 이 조문을 가지고 실무에서 실제로 증거신청을 기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 이지영 주무위원

- 실무지원단에서도 약 10개 정도의 안을 가지고 비교하였으며, 전문위원 연구반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한 결과 채택된 것이 회의자료 요약본 18면의 내용임. 현행 규정의 ‘필요한 증거’가 ‘관련된 증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관련된’의 의미를 넘어 ‘관련되고 필요한’으로 분절해서 의미를 강조하는 안이 선택된 것임
- 규칙 개정만으로 바로 실무가 변화되지는 않을 것임. 규칙 개정을 통해 변화의 방향을 홍보하고, 재판부별 정보 공유와 실무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위원장

- 본래 규칙 개정이 없더라도 관련성이 없는 증거신청은 기각할 수 있음에도 실무에서 잘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심리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규칙 개정을 논의한다는 점이 법관들에게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음
- 증거채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장애가 되는 경우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든지, 피고인에게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내용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회의자료 요약본 32면 내용과 같이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내용부인 시 부동의 부분의 특정을 요구할 경우 피고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는지?

○ 이지영 주무위원

- 불이익은 없으며 협조를 구하는 취지임

○ 위원장

- 피고인에게 협조할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 드렸음. 증거신청 단계에서 입증취지 기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좋은 개선책이 될 것이라 생각함. 검사 측의 협조가 필요할 텐데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 이지영 주무위원

-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을 상대로 규칙 개정의 취지와 목적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위원장

- 녹음·녹화물에 대한 증거조사 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중요 부분만을 재생할 수 있도록 규칙이 개정된 후, 심리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만 특정하여 재생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시길 바람

○ 김영훈 위원

- 입증취지를 기재하도록 하거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내용부인 시 부동의 부분을 특정하도록 요구하는 부분은 합당한 개선책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쟁점이 명확해지고 실체 진실에 더욱 다가갈 수 있으리라 기대함
- 회의자료 요약본 43면 공판절차의 갱신절차 특칙 규정 신설안 제144조 제3항에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녹취서의 기재나 녹음물의 내용과 불일치한다고 이





의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녹음·녹화매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취 또는 시청하면서 녹취서 등 기재내용의 일치나 오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설안 내용은 직권주의적 색채가 강하다는 느낌을 받음. 불일치한다고 이의할 경우뿐만 아니라 억양·태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녹음물을 청취할 필요성을 소명하는 경우’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신설안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문구가 다듬어질 필요가 있음

- 간이공판절차 요건 재설계 방안과 관련하여, 자백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 이지영 주무위원

- 회의자료 63면 개정안 제286조의2 제2호(‘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한 때’) 규정은 특히 자백하는 경우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함. 실무적으로 공판절차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진술 시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반성문의 문구 등에 따라 항소심에서 간이공판절차 회부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쌍방 당사자의 동의로도 간이공판절차 회부가 가능하다면 이와 같은 사례가 줄어들 것임. 대체로 자백하는 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김영훈 위원

- 어떤 취지인지 이해하였음

■ 다음과 같은 조현욱 위원, 위원장의 질의 및 이에 대한 이지영 주무위원의 답변, 이경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조현욱 위원

-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음. 회의자료 요약본 18면 중 개정안의 증거 선별의무와 관련하여, 수사기록에 정리된 서류 중 일부는 검사가 보관하고, 일부는 선별하여 법원에 증거로 신청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 이지영 주무위원

- 현재도 그렇게 분리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조현욱 위원



- 검사 측에서 제출하지 않는 증거는 대부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일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변호인들이 검찰에 증거개시 신청을 하고 이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 또한 검사 측에서 제출하지 않는 증거는 대부분 피고인 입장에서 동의하는 증거들일 것이므로 선별의무 부과가 재판의 신속성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지 의문이 들었음. 따라서 개정안 내용 중 ‘선별’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입증취지를 상세히 기재하고 필요한 증거를 신청하도록 하는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함
- 회의자료 요약본 43면 공판절차의 갱신절차 특칙 규정 신설안 제144조 제1항 제4호 단서 부분과 관련하여, 실무에서 변호인들도 다 녹취서를 복사해서 보기 때문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간이한 방법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찬성함
- 회의자료 요약본 64면 개정안 제286조의2 제2호의 내용을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간이공판절차 회부에 동의한 때’와 같이 재판부가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쌍방이 동의하는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함
- 피고인 불출석 재판제도 개선 방안 중 회의자료 요약본 76면 소송촉진법 제23조 개정안과 같이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던 경우 등에는 무의미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개정안에 동의함. 다만, 송달방식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공판기일 등에서 우편 송달 외에 문자 송달 방식에 동의할 경우 문자 송달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 이경춘 위원
  - 조현욱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사 측에서 유죄와 관련된 증거만 제출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제약이 생길 수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장치를 검토해보기를 권유 드림
- 위원장
  - 해외 사례 중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공개해야 되는 의무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떠한지?
- 이지영 주무위원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가 거부할 경우 법원에 허가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 조현욱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선별하여’라는 문구와 관련하여, 지금도 수사검사에 의해 1차적으로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나치게 방대한 증거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별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개정의 취지를 명확히 전달하려 하였음.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의견은 좋은 의견이라 생각되며 조금 더 고려해보겠음
- 불출석 재판의 경우 문자 송달을 하게 되면 수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음. 소환의 적법성, 불출석에 대한 귀책사유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교부 송달의 방식이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칙으로 이를 완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함

## 다. 건의문 의결

■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의결하였음

### ○ ① 지향점

- 형사재판에서 나타나는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심증 형성의 어려움, 심리 단절, 당사자의 소송비용 증가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절차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실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충실하게 구현할 필요가 있음

### ○ ② 개선방안

- 복잡한 형사사건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하여 심리의 방식을 적정화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관련성과 필요성에 근거한 선별적인 증거신청 및 채부, 쟁점에 집중된 증인신문과 합리적인 방식의 서증조사, 녹음·녹화물에 관한 증거조사 방법 및 공판개신절차 개선 등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직후 신속하게 검사 보관 증거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 사건의 특성 및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게 증거조사를 탄력적·효율적으로 실시



하고 한정된 사법자원을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 외에도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새로운 요건이 마련되어야 함

-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 재판 진행 단계를 고려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출석 재판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6. 제7차 회의 안건 설명

### ▣ 재판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방안

- 장정환 주무위원, 논의의 필요성, 인공지능 활용 제안 검토 방법론 등을 보고함

## 7. 제8차 회의 안건 선정

### ▣ 위원장, 제8차 회의 안건으로 ‘사법보좌관 제도 개선’을 선정함

## 8. 비공개 또는 익명화 여부에 관한 의결

- ▣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제6차 회의 회의록 작성 시 비공개 또는 익명화할 부분이 없다고 결정함

## 9.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자료 외부 공개 여부

- ▣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제6차 회의 자료의 외부 공개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

1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5차 회의 회의록	공개
2	사법정책자문위원회 대법원장 2차 부의 안건	공개
3	대법원장 2차 부의 안건 설명자료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 제고 방안)	공개
4	대법원장 2차 부의 안건 설명자료 (법관에 대한 대외적 부담 요인 분석과 법관의 보호 방안)	공개



5	대법원장 2차 부의 안건 설명자료(시니어판사 제도)	공개
6	민사항소심 심리모델 개선	공개
7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	공개
8	안건 설명자료(재판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방안)	공개

### III. 다음 회의: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7차 회의

■ 일시: 2025. 1. 13.(수) 15:00

■ 장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끝).